



<span style="color:red">↑</span> 코스피 2190.47 (+9.74)	<span style="color:blue">↓</span> 코스닥 730.58 (-2.89)
<span style="color:red">↑</span> 금리 (미국 3년) 1.80 (+0.02)	<span style="color:blue">↓</span> 환율 (원/달러) 1123.90 (-0.80) (12일)



[금융]  
신한금융 '순익 3兆'  
리딩뱅크 왕좌  
1년 만에 재탈환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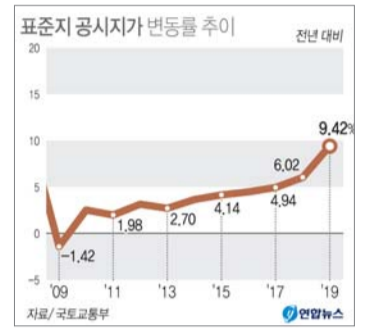
### 북적이는 전남-광주, 추락하는 구미-울산

# 명암 엇갈린 영·호남 경제지도

# 전국 땅값 9.42% ↑ 서울시 13.87% '1위'

### 2019 표준지 공시지가

강남구 23.13% '최고'



정부가 초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가 13.87%나 올랐다. 서울은 시·도별 상승률에서 제주도를 4위로 밀어내고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표준지 평균 땅값은 작년보다 9.42% 올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고가(高價)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이 지표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부담할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명동이나 강남구 등 비싼 땅을 소유한 사람은 보유세가 최대 50% 가량 오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공시

지가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 대비 공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전년(6.02%)보다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2면에 계속>

/채신화 기자 csh9101@

### 기업 몰리는 호남

LG전자·현대차·위니아 등 한전대학까지 유치 好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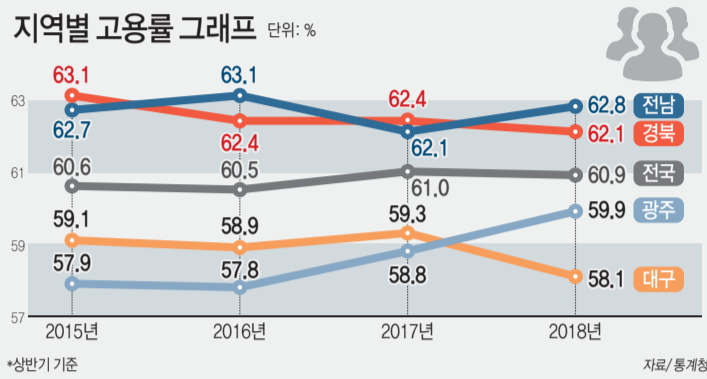
영남과 호남의 제조업 지도가 뒤바뀌고 있다. 주요 공기업과 제조 공장들이 잇따라 호남선에 올라타는 가운데, 영남은 중공업 경제 위기에 기업 상경러시까지 겹치면서 공동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광주시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만나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참가를 논의했다.

과학기술창업단지는 광주 첨단 3지구에 AI 관련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LG전자는 잘 갖춰진 인프라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달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합작법인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총 자본금은 7000억원이다. 14일 현대차와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주주공모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대우위니아도 2017년 아산에



있던 공장을 광주로 옮겼다. 대우전자를 인수하면서 대우전자 광주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결정이다. 이전비용은 512억원이 들었으며, 10% 가량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전라남도도 다양한 분야 산업 단지를 유치한 상태다. 2014년 말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이 들어섰으며, 조만간 한전 대학까지 새로 세우기로 합의를 마쳤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활발하게 가동되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빛그린산단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 중이다.

호남 지역 고용률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용률이 상반기 기준 2015년 57.9%에서 59.9%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고용

률이 0.3%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다. 전라남도도 62.7%에서 62.8%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시가 산업단지 유치전을 이어갈 예정인 만큼, 고용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영남 지역은 고용률 하락이 눈에 띄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대구광역시 고용률은 2015년 59.1%에서 2018년 58.1%로 1%포인트 하락했다. 2017년 이후 광주광역시에 역전당했다. 경상북도 역시 63.1%에서 62.1%로 전라남도보다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영남 지방 고용률 하락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산업단지가 밀집한 구미시에서 LG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수

### 텅텅 비는 영남

중공업-전자 공동화 우려 고용률 등 호남에 뒤져

원으로 동지를 옮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소득을 자랑하던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몇년째 침체일로를 겪으면서다. 울산 고용률은 2015년 58.9%에서 2018년 58.6%로 떨어진 상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과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로 올라섰다. 역전세라도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광주형 공장 등으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구미시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SK하이닉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도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참가 중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미시는 SK실트론과 LG디스플레이 및 삼성전자 일부뿐만 남아있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SK하이닉스 유치가 좌절된다면 어려움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文 대통령, 적극행정 지원



국무회의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현장에 규제 샌드박스를 최초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부각시킨 후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신 허용·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혁신경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 불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1세

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즉 '혁신경제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일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의 친절한 안내자 역할 수행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발굴 노력 ▲규제 샌드박스 홍보 및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의 최초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 홍보 ▲사전 컨설팅 제도 등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등을 당부했다. /우승훈 기자 dn1114@



다시 찾아온 불청객 경기도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오산 시내가 뿌연다. /연합뉴스

# 與, '구밀복검' 정책에 대기업 깊은 한숨

<입에는 꿀을 발랐으나 속에는 칼을 숨김>

여당, 상법개정안 추진 경영권 침탈 악용 우려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재계의 한숨이 깊다.

12일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가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제서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국회가 해결해주라는 입장인데, 여당이 오히려

려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상법 개정안 추진이)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는 것일 뿐, (기업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여당은 기업 경영의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맡은 조정석 의원은 이날 "불공정거래 근

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안 적극 나서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

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2면에 계속>

/석대성 기자 bigstar@